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94
----------	-----

발의년월일 : 2009년 11월 17일

발 의 자 : 조신형 의원 외 7 인

1. 주 문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소외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은 도모하기 위함.
- 나.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국론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소외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라. 국민적 결단과 초당적 합의사항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마. 정부와 정치권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특화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특화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분산정책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변경고시 등 모든 계획을 일정에 따라 즉각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은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약 500여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와 세미나 등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법령이 아닌 훈령에 따라 구성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불과 두 달 만에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적 진통 끝에 마련된 국민적 결단과 초당적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것으로 대국민 기만행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서울·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비수도권 전체를 공멸시키고 지역간 갈등과 국론분열 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로써 즉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국민통합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서 대전광역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아픔도 감수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논의는 150만 대전광역시민에게 또 다시 대전광역시 소외정책에 대한 소외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변경의 문제는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통합, 신뢰회복,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들의 의지와 민심을 담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입장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논의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론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규정된 계획대로 9부 2처 2청의 변경고시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결단과 초당적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 고사책략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광역시 소외정책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9. 11. 17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대통령실 정무수석
3. 대통령실 경제수석
4.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5.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6.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7. 국무총리
8. 국무총리실장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0. 행정안전부장관
11. 지식경제부장관
12. 환경부장관
13. 국토해양부장관
14. 국회의장
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16.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7. 민주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8. 자유선진당 대표(정책위원회 의장)
19. 창조한국당 대표